

호남소외 상징 ‘경전선’ 4년 넘게 ‘예타 조사’ 만

유일 단선 광주~순천 116.5km 전철화 사업 하세월
30일 국회 토론회…내년 기본계획 등 첫 단추 주목

호남소외의 상징으로 불리는 경전선 호남구간 전철화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역민들의 교통복지 확대와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4년 넘게 끌어 온 예비타당성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경상도(부산부전)와 전라도(광주 순정)를 잇는 경전선 전체구간(300km) 중 ‘광주~순천’ 구간만 유일한 단선으로 남아있다.

‘광주~순천’은 1930년 개통 이후 지금까지 개량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고속버스로 1시간여 거리를 기차로 가면 2시간 16분이나 걸린다. 나머지 ‘순천~광양~진주~부산’은 복선화가 이뤄졌

고, 전철화사업도 마무리 단계다.

이 구간은 호남소외의 상징으로 불리며 지난 2005년부터 광주 순정-화순 이양-보성-순천을 잇는 116.5km에 2조 304억원을 들여 해당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이 추진됐지만 지금까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말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6~2020)에, 2011년 4월과 2016년 6월 제2차·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지만 투자우선순위에 밀린 상황이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4년 2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지만, 4년 넘게 사업추진 결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정책성·균형발전 요소 등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에다 비용대비 편익(B/C)도 일부 노선 조정 등을 통해 2015년 0.55, 2016년 0.74, 지난해 0.81로 점차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비용절감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선 활용 등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결과 도출은 하세월이다.

에다 결과가 늦어지면서 광주시와 전남도, 경남도를 비롯해 광주·순천·부산·마산·창원 등 영호남 8개 지역 상공회의소는 그 동안 수 차례 대정부 건의문을 내고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오는 30일에는 국회도서관에서 김경진·손금주·이정현 의원이 주최하고, 광주시·전남도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열려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영호남 교류 확대, 광주·전남 기업 수출품 운송편의, 지역민 교통복지 차원에서 전철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만 4년이 넘었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반영된 만큼 광주시·정지권 함께 정부를 설득해 내년 초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착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민주당 광주·전남 경선 ‘해도 너무 한다’

단체장·지방의원·국회의원 선거 곳곳 파열음

더불어민주당이 후보경선과 관련해 원칙없는 기준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시선도 싸늘하다.

특히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 경선은 물론 국회의원 재선거 경선 2곳도 모두 논란에 휩싸여 후보간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광주시장 경선은 시작부터 당원명부 유출 사건 등으로 이어진 고소·고발전은 후보가 확정된 지금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다.

광주의 5개 구청장 경선도 시끄럽긴 마찬가지다.

동구는 3인 경선 원칙에 4인을 경선에 구설에 올랐고, 서구는 현재 구청장의 컷오프와 무소속 출마 선언으로 시끄러운 상태다.

남구는 후보자격 문제로 중앙당이 아예 보류지역으로 지정해 경선일정조차 나오지 않았으며, 북구는 후보간 단일화 합의에서 잡음이 나오면서 뜨거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광산구도 컷오프에서 탈락한 4명의 후보 중 3명이 반발해 재심청구를 했고, 이중 1명은 구제된 상태다. 1차 컷오프를 당한 김삼호·임한필·장성수 예비후보는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 김삼호 후보만 최종적으로 구제된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3파전이 예상되자 김영록·윤봉근 후보는 지난 24일 후보단일화를 발표했다가 하루만에 단일화 결정을 철회하는 춘극을 연출했다.

광주 서구갑과 무안·영암·신안 등 국회의원 재선거도 흥역을 치르고 있

다.

광주 서구갑은 중앙당의 전략공천 방침에 대해 송갑석 예비후보의 반발에 일부 시민사회단체들도 가세하면서 경선 지역으로 변경됐다.

무안·영암·신안 재선거도 서삼석 예비후보 측이 경로당에 주민들을 모아 놓고, 선거 여론조사용 전화가 걸려 오면 대신 응답하는 방식으로 대리투표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결과발표가 보류됐다.

이같은 민주당의 경선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지역민들의 시선은 딱따갑다.

광산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민주당의 오락가락한 경선기준과 후보간의 싸움으로 올해 지방선거는 오만선거로 전락했다”며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정치외면은 물론 혐오까지 불러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정상회담 성공 기원해요” 제20회 함평나비대축제 개막을 이틀 앞둔 25일 오전 함평읍 엑스포공원에 나온 어린이들이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글귀를 적은 종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김태규 기자

문 대통령, ‘공동연락사무소’ 제안할 듯

판문점 유력…‘공동’ 사무소→‘주재’ 사무소 수순

문재인 대통령은 4·27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정와대 관계자는 25일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연락사무소를 두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무소는 특정사안이 생겼을 때 남북이 모이는 형태가 아니라 남북 관계자가 같은 공간에 함께 상시로 근무하며 소통하는 상설기구를 의미한다.

문 대통령이 공동사무소 설치를 제의할 경우 그 장소는 판문점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정와대 관계자는 “공동사무소는 한반



도 긴장완화 등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본다”며 “서울이나 평양보다는 판문점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보자면 공동연락사무소가 1단계, 남북 각자의 지역에 주재하는 사무소 설치를 2단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두 정상이 이번에는 어느 주제를 어디까지 말할지는 회담장에 들어설 때까지 알 수 없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이행방법도 어느 수준의 얘기가 나올지도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공동 연락사무소의 판문점 설치에 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추진과도 맞물려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판문점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으로, 그 원칙에 합의할 가능성은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판문점에서 수시·정례 회담이 열린다면 남북 간 매우 중요한 문제 이면서도 실무나 고위급에서는 안 풀리는 문제 하나만을 놓고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타결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하면 우발적 충돌방지 등 남북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데다 비핵화 이행과정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추진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서울=강병운 기자

광주 학생들, 남북정상회담 생방송 시청

시교육청, 홈페이지 자료활용 계기교육도

광주지역 학생들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생방송으로 시청한다.

광주시교육청은 27일 광주지역 일선학교들은 학교장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정상회담을 TV로 시청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2018남북정상회담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들을 활용해 계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학생들은 시청한 정상회담 장면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원, 학교에서 학생들이 정상회담 성공을 위

해 실천 가능한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에 릴레이 글 남기기, 나의 평화지수 알아보기 등 활동에 참여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23일 11년 만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사에 한반도기를 게양하고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남북 교육교류 제안서를 청와대와 통일부, 남북 정상회담준비위원회에 전달했다.

제안서엔 남북 학생교류, 광주학생

독립운동기념식에 북한 학생대표단 초청, 시·도교육감단 방북, 남북 교원간 학술교류와 교육기관 상호방문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민족통일성 회복을 위해 학생 수학여행단의 방북 허용을 요청했다.

이재남 광주시교육청 정책기획관은 “남북 정상이 만나 민족문제를 대화로 평화롭게 해결하는 모습을 학생들이 보면서 ‘통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동안의 분단과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시대가 열리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장면을 통해 살아 있는 통일교육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전남매일 연중 일자리 창출 캠페인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
광양시가 함께 합니다.

광양시 GWANGYANG-SI 희망일자리센터 061) 797-3352